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19. 10.

한 국 은 행

## - 목 차 -

(한국은행 소관 : 20건)

1.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위험 점검 필요 .....	1
2.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 필요 .....	3
3. 가계부채 통계 개선 필요 .....	4
4. 외환보유액의 운용·관리 개선 필요 .....	6
5. 통화스와프의 체결국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7
6.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운영 점검 및 제재 강화 .....	8
7.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선 및 적극적 지원 필요 .....	9
8.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10
9.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필요 .....	12
10. 디지털 화폐 도입 방안 연구 .....	13
11. 북한에 대한 통계 조사 및 연구 강화 .....	14
12.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필요 .....	15
13. 서원기업과의 수의계약 문제 개선 필요 .....	16
14. 임차사택 제도 개선 .....	17
15.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	18
16. 지역본부 운영 개선 필요 .....	19
17. 지역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검토 필요 .....	20
18. 지역본부의 조사·연구기능 강화 필요 .....	21
19. 사전통계 제공 시간 개선 .....	23
20. 청와대 등에 대한 직원 파견제도 개선 .....	24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1.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위험 점검 필요</p> <p>기준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다중채무자·자영업자 등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취약차주* 및 자영업자 등의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대응할 미시적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동 차주의 가계부채 현황 및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잠재리스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왔음</p> <p>*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p> <p>○ 연 4회(3·6·9·12월)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회의」에서 이들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안정보고서(6·12월, 국회 제출), 보도자료(3·9월) 등을 통해 발표*</p> <p>* 소득 측면에서의 가계부채 상환능력 평가(2018.12월), 최근 가계부채 상황 및 취약차주 부채 규모(2019.3월), 최근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건전성 평가(6월)</p> <p><input type="checkbox"/> 또한 「가계부채관리협의체」,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부·감독당국과 이들 차주의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음</p> <p>○ 특히 정부 주도의 취약차주 채무상환부담 경감* 등의 대책 마련에도 참여**하여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안 등에도 공동 대응</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원금상환 유예, 법정 최고금리 및 연체 금리 인하, 담보권 실행 유예 등</p> <p>**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월) 및 후속 대책(2018.1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취약차주 및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음</p> <p>○ 최근 경기둔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비은행 및 신용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차주와 자영업업황 악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또한 필요시 정부·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방안도 강구하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2.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 필요</p> <p>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 따라 외국인 자본 유출 및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정책금리는 2018.3월 역전되어 역전폭이 2019.7월 100bp까지 확대되었다가 2019.9월 현재 50bp를 나타내는 등 역전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으로 대체로 순유입 기조를 유지(2018.3월~2019.7월중 월평균 +24.6억달러)</li> <li>○ 다만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는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미·중 무역분쟁,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상황에 따라 큰 폭 등락</li> <li>□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li> <li>○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우세하지만, 9월 FOMC회의 참석자들간 향후 정책 금리 운용방향에 대한 이견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명의 위원이 연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예상한 반면, 5명은 금리인상을, 5명은 금리동결을 전망</li> </ul> </li> <li>□ 이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향후 연준의 정책결정을 전후하여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li> <li>□ 따라서 한국은행은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자금흐름 변화 및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li> <li>○ 이 과정에서 시장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li> </ul>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b>3. 가계부채 통계 개선 필요</b></p> <p>가계부채 통계에 전세보증금 및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현재 작성·발표되고 있는 가계부채 통계는 가계부문이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채로 한정하고 있음</li> <li><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보증금은 개인간 채무로 가계부문 전체로 보면 임대차 가구간 채권·채무가 상계되는 데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할 경우 동 통계가 포함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등과 중복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li> <li>○ 또한 개인사업자대출은 일반가계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영위 등을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이므로 이를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가 과다추정될 수 있음</li> <li>○ 한편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부채에 포함시 국가간 비교에 대한 정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및 가계부문의 건전성 평가에 있어서 전세보증금* 및 개인사업자대출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동향 및 잠재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2019.3월), 부동산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2019.3월) 등</li> </ul> </li> </ul>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중 일부가 가계자금으로 혼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한 자영업자의 부채* 현황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수시로 분석하고 있음</p> <p>* 최근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건전성 평가(2019.6월) 등</p> <p>□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정부·감독당국과 협의해 통계수집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잠재부실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b>4. 외환보유액의 운용·관리 개선 필요</b></p> <p>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운용·관리 현황 및 수익률 등 기본적인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의 통화구성, 상품구성, 운용체계, 리스크관리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답변 등을 통해 국회에 보고하여 왔음</li> <li>○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2019년중에도 연차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위탁운용자산에 관한 정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음</li> <li>○ 다만 수익률 등 일부 자료의 경우 공개시 단기적인 수익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운용의 중심이 유동성 및 안전성보다 수익성에 치우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 왔음</li> <li><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음</li> <li><input type="checkbox"/> 한편 한국은행의 운용·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li> <li>○ 외환보유액 상위 20개국중 운용자산의 상품 및 통화별 구성 비중을 모두 공개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서 6개국에 불과</li> <li>○ 외화자산의 운용·관리 현황으로서 운용 과정, 리스크관리 체계, 위탁운용 현황 등 다양한 추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음</li> </ul>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5. 통화스와프의 체결국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p> <p>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미국·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노력을 지속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그 동안 금융안전망 강화 및 원화 국제화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범주의 국가들과 여러 형태의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하여 왔음</p> <p>○ ASEAN+3 국가들과는 다자간 통화스와프(미달러화)을, 주요 기축통화국 및 선진국(캐나다, 스위스, 호주), 주요 교역국 및 자원부국(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UAE)과는 양자간 통화스와프(자국통화)을 체결 중임</p> <p>— 2019.4월에는 자원부국인 UAE와 통화스와프 재계약을 체결하였음</p> <p>○ 특히 기축통화국인 캐나다(2017.11월) 및 스위스(2018.2월)와 신규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통화스와프체결국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음</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규모, 체결국 및 방법 등에 있어 통화스와프계약이 보다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 data-bbox="336 327 790 421"><b>6.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운영 점검 및 제재 강화</b></p> <p data-bbox="395 488 790 734">금융기관의 위규 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data-bbox="799 327 1476 472">□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위규 취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p> <p data-bbox="826 521 1476 719">○ 제재 차등화 제도 시행*, 금융기관별 수시점검 횟수 확대**, 사전 전산심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및 공동검사를 통한 사후점검 강화 등</p> <p data-bbox="879 763 1476 842">* 위규 경중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감축 규모를 차등화(2015.5월)</p> <p data-bbox="863 846 1476 925">** 금융기관별 위규 대출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2019.6월)</p> <p data-bbox="799 981 1476 1070">□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위규 대출 규모 및 비중이 감소*</p> <p data-bbox="863 1122 1476 1200">* 연중평잔 기준, ( )내는 전체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 대비 비중:</p> <p data-bbox="895 1227 1476 1391">2014년 1,608억원(1.5%) → 2015년 933억원(0.6%) → 2016년 295억원(0.2%) → 2017년 506억원(0.3%) → 2018년 231억원(0.2%) → 2019.1~6월 365억원(0.3%)</p> <p data-bbox="799 1447 1476 1644">□ 앞으로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사전 심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금융기관의 위규 대출 취급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p> <p data-bbox="863 1693 1476 1805">* 금융기관 대출실적의 지원 적격성 여부를 체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중(2020년 가동 예정)</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7.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선 및 적극적 지원 필요</p> <p>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의 저금리 혜택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연계되지 않고 시중은행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p> <p>전체 대출실적이 총 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원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p>	<p>□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연계되는지에 대해 정례적으로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p> <p>○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저리자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분을 중소기업 대출금리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p> <p>* 실제 금리경감폭은 프로그램에 따라 0.3~0.8%p 수준</p> <p>□ 앞으로 한국은행은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연계되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할 계획</p> <p>○ 아울러 은행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은행들의 금리경감을 적극 독려할 예정</p> <p>□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2019.10월)</p> <p>○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p> <p>*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창업기업·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신규 지원</p> <p>** 기술형창업기업의 기술등급 요건 완화(1~4등급 → 1~6등급), 일반창업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요건(3인 이상) 폐지 등</p> <p>○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무역금융 취급유인 강화*</p> <p>* 은행이 취급한 무역금융 순증액의 100%를 추가 지원</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b>8.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b></p> <p>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열석발언권 폐지, 국내·외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축소 방안 등을 검토할 것</p>	<p>□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독립적·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꾸준히 노력하였음</p> <p>○ 금융통화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관련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p> <p>* 정우택의원 대표발의(금융통화위원 추천기관 변경 등, 2018.3월), 서형수의원 대표발의(금융통화위원 수 및 추천기관 확대 등, 2018.10월)</p> <p>○ 열석발언제도의 타당성과 주요 선진국 사례를 조사·검토하고 관련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앞 개진</p> <p>* 심기준의원 대표발의(열석발언권 폐지 등, 2018.7월)</p> <p>○ 국내외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중앙은행의 역할과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실시</p> <p>— 금융안정 등 정책목적에 부합하고 독립성 등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출자·출연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최소한으로 한정</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다만,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의 경우 현재 법률에 따르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p> <p>* 현재 국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음(2019.9월 심기준의원 대표발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p> <p>□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 조사·연구와 의견 개진에 힘쓰도록 하겠음</p> <p>○ 아울러 향후 정부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 납입 요청 시 정부와 협의하여 출자·출연금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b>9.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필요</b></p> <p>한국은행이 주요 경제 현안 및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강화하여 대외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및 구조적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 양상 및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점검*</p> <p>*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해외경제 포커스, 2019.4월) 글로벌 충격이 교역조건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조사통계월보, 2019.5월호) 수출의 기초적 흐름 판단을 위한 수출상황지수(ET-COIN) 개발(조사통계월보, 2019.7월호)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9.8월)</p> <p>○ 또한 생산성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p> <p>*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조사통계월보, 2019.3월호)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조사통계월보, 2019.4월호) 노동이동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조사통계월보, 2019.6월호)</p> <p>**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조사통계월보, 2019.8월호)</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과 경제구조 변화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그 결과를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대외에 발표할 계획임</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10. 디지털 화폐 도입 방안 연구</p> <p>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이 선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암호자산 관련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행내 TF를 운영하고 연구를 수행하였음</p> <p>○ 그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19.1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특성, 구현방식, 통화정책 및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적 쟁점 등을 담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발간</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음</p> <p>○ 리브라* 등 민간부문의 암호자산 상용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BIS 등의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강화</p> <p>* 페이스북은 송금, 결제 등에 활용할 암호자산 ‘리브라’ 발행계획을 공개 (2019.6.18일)</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b>11. 북한에 대한 통계 조사 및 연구 강화</b></p> <p>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 관련 통계가 북한의 실제 경제상황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통계 조사 및 연구를 강화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북한경제의 개괄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1991년 이래 매년 북한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등을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기관이 발표하는 북한통계를 이용하여 북한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GDP는 북한관련 정보가 가장 많은 국내 유관기관들로부터 입수한 기초자료(생산량, 무역통계 등)를 바탕으로 국제기준(SNA)에 맞춰 작성한 후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발표</li> <li>○ 북한시장의 가격 및 환율(데일리 NK 발표), 북중무역(중국해관 발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북한경제 현황을 파악</li> </ul> <p><input type="checkbox"/> 그러나 북한 통계당국(중앙통계국)이 직접 공표하는 통계가 없고 신뢰할 만한 북한 관련 자료도 부족한 상황임</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북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경제에 대한 조사·연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북한의 시장화 진전 등을 포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li> <li>○ 북한경제의 구조변화, 재정금융부문의 제도변화, 남북간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li> </ul>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b>12.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필요</b></p> <p>한국은행 본부의 지원업무 인력이 금융감독원·산업은행의 2배에 이르는 등 조직·인력 운영이 방만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의 지원업무 인력이 금융감독원 및 산업은행에 비해 다소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임</p> <p>○ 이는 중앙은행으로서 고유업무 수행 등을 위해 타 기관에 비해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업무 인력이 필요한 데 일부 기인하고 있음</p> <p>— 사고발생 시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현금거래의 이중점검 원칙을 견지</p> <p>— 중앙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연수프로그램을 직접 개발</p> <p><input type="checkbox"/> 현재 한국은행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업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p> <p>○ 일부 연수운영조직을 축소*하고 업무처리 절차 등을 간소화</p> <p>* 인재개발원 국내연수팀과 글로벌연수팀 통합</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지원업무 인력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b>13. 서원기업과의 수의계약 문제 개선 필요</b></p> <p>한국은행 행우회가 소유한 서원기업과의 수의계약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그동안 서원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진행 하였던 경인쇄 및 화폐박물관 관련 계약을 금년 초부터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b>14. 임차사택 제도 개선</b></p> <p>임차사택 사용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임차사택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현재 노조와 임차사택 사용료 감면제도 폐지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임</p> <p>○ 아울러 임차사택의 부정당 사용 적발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b>15.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b></p> <p>감사원 감사(2018.9월) 결과 한국은행은 2013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16개를 정비하도록 지적받았으나 일부 항목을 계속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향후 동 운용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복리후생 항목은 감축 또는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배우자의 단체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는 등 지적사항 중 일부를 개선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나머지 지적사항도 모두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시하였으며 적극적인 노사협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 data-bbox="339 327 786 421"><b>16. 지역본부 운영 개선 필요</b></p> <p data-bbox="395 488 786 786">지역본부의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여 관리·지원인력의 비중을 줄이는 등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data-bbox="802 327 1471 533">□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경우 타 기관과 달리 대부분 금고를 보유한 국가보안 시설로서 건물의 보안장비 설치 및 유지 등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실정임</p> <p data-bbox="802 577 1471 786">□ 최근 한국은행은 지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역본부장 전담운전직(2019.5월) 및 소형 지역본부* 부분부장직(2019.7월)을 폐지한 바 있음</p> <p data-bbox="850 831 1193 864">* 목포, 포항, 강릉 본부</p> <p data-bbox="802 925 1471 1182">□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지원인력 규모의 적정성 점검 및 유사업무 통합 폐합 등을 통해 지원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임</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 data-bbox="339 324 786 470"><b>17. 지역별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 증액 검토 필요</b></p> <p data-bbox="395 537 786 840">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data-bbox="802 324 1471 526">□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p> <p data-bbox="826 593 1471 1019">○ 지역경제여건 및 지역특성에 비추어 중점 지원이 필요한 부문을 지원대상으로 신규 발굴하여 지원하는 한편,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을 지원하는 특별지원한도 운용기간을 2년 연장(2019.9~2021.8월)하고 지원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2019.9월 시행)</p> <p data-bbox="826 1086 1471 1332">○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을 활용하여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전북본부), 성동·STX조선해양 구조조정(경남본부), 강원산불(강릉본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을 지원</p> <p data-bbox="802 1444 1471 1780">□ 앞으로 한국은행은 지역별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은행대출실적 등 신용공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시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b>18.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 필요</b></p> <p>지역경제의 현황,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있도록 노력할 것</p>	<p>□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통화신용정책의 효과적 수행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심층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음</p> <p>○ 우선 지역경제 동향 및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4회 「지역경제 보고서」로 발간(3, 6, 9, 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 요인 및 향후 전망”(2018.12월), “2019년 제조업 설비투자 계획”(2019.3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특별 서베이를 실시</li> </ul> <p>○ 또한 지역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정부 관련부처, 지자체, 지역 언론 등에 제공*</p> <p>*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생산성 분석 및 정책과제(2019.1월),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 과제(2019.7월), 대외 교역 여건 변화가 광주전남 및 인천지역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2019.7월), 경상남도의 지역금융 현황 및 시사점(2019.8월), 부산지역 기계산업 거래네트워크와 기업 경영성과(2019.7월), 충청권 바이오 산업 현황과 발전방안(2019.7월) 등</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기업경영분석 등 지역경제 동향 파악과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를 편제하여 발표</li> <li>□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li> </ul>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b>19. 사전통계 제공 시간 개선</b></p> <p>한국은행이 관계기관 등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시간이 기관별·시기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점검하여 개선하고, 주식시장 마감 전에 중요 통계를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p>	<p>□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라 통계 사전제공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관계기관에 대한 통계 사전제공 시간을 통계 공표예정일 전날 15:30 이후로 즉시 조정(2018.10.23일)하여 시행하고 있음</p> <p>○ 또한 통계 사전제공 관련부서(경제통계국)는 「통계자료 사전제공에 관한 절차」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였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 data-bbox="336 331 790 421"><b>20. 청와대 등에 대한 직원 파견제도 개선</b></p> <p data-bbox="395 495 790 1055">한국은행이 대통령비서실·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에 소속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중립성·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청와대·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의 소속직원 파견 금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 data-bbox="804 331 1473 528">□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원활한 경제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등에 금융·경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파견하고 있음</p> <p data-bbox="826 566 1473 920">○ 다만 파견대상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실무자급(3·4급 팀원) 직원을 선정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중립성·독립성 침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고 있음</p> <p data-bbox="804 958 1473 1205">□ 앞으로도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직원 파견의 적정성 등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중립성·독립성 침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p>